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발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9일 오후 2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검토 태스크포스(TF)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안부 합의가 내용상·절차상으로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사 합의의 재협상·파기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일본 아베 내각의 입장에 비춰 볼 때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국가간 합의를 선불리 파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처리, 10억엔 반환 여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연합뉴스

스마트폰 전쟁, 이젠 사운드로 승부

삼성전자 '갤럭시8 시리즈' 최신 운영체제 순차 업데이트 입체음향 돌비 애트모스 적용

LG전자도 'V시리즈' 통해 멀티미디어 특화 기능 선보여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 중인 스마트폰 업계에 음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달 말부터 갤럭시S8, 갤럭시S8 플러스, 갤럭시노트8 등에 최신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8.0(오레오) 업데이트를 순차 적용한다.

미국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드잇에 유출된 갤럭시S8 시리즈와 갤럭시노트8용 오레오8 업데이트에는 입체음향시스템 돌비 애트모스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돌비 애트모스는 음악 장르에 따라 저음을 강조하거나 고음을 강조하는 이퀄라이저(EQ) 설정과 서라운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에 적용되는 돌비 애트모스는 자동, 동영상, 음악, 음성 등 4개 사전 설정이 가능하며 EQ설정과 서라운드 애플리케이션을 미세하게 조정해 사용자 취향에 맞출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미세 음향설정이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 트렌드가



LG전자 V30에 적용된 사운드 프리셋과 디지털 필터 기능. /LG전자

화면 크기와 화질 경쟁에 이어 음향 경쟁으로 변화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대화면과 화질 경쟁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자사 스마트폰에 18.5:9 화면비의 인티니티 디스플레이를 도입했다. LG전자 역시 스마트폰에 18:9 화면비의 풀비전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풀비전 디스플레이는 베젤을 줄여 스마트폰 전체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화면 크기는 키우는 기술이다. 덕분에 사용자들은 손 안에 꼭 들어오는 스마트폰에서 시원한 화면으로 다양한 크기의 영상 콘텐츠를 몰입감 넘치도록 즐기게 됐다.

하반기에는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에 OLED 디스플레이가 도입됐다. 이전부터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던 삼성전자에 이어 LG

전자도 화질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OLED 디스플레이는 LCD 디스플레이보다 화질과 광시야각, 색 표현력, 명암비 등이 뛰어나다.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디스플레이의 화소 크기가 작아지는데,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는 화소가 작아질수록 개별 화소 밝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OLED 디스플레이는 스스로 빛을 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고 화질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고 화질이 개선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음향으로 옮겨갔다. 영화와 같은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볼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음향 성능이 아쉬움으로 변해간 것.

이러한 요구에 먼저 대응한 것은 LG전자다. LG전자는 멀티미디어 기능에 특화된 V시리즈를 선보여왔다. V30은 싱글 DAC 대비 잡음을 최대 50% 줄여주는 쿼드 DAC를

탑재했고 오디오 명가 뱅앤올룹슨(B&O)의 튜닝을 거쳤다. 사운드 프리셋, 디지털 필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터치 한 번으로 개인 취향과 음악 특징에 맞춰 듣고 음악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색만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영상 콘텐츠나 VR 콘텐츠를 즐길 때 몰입감과 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 최초로 저용량 하이파이 스트리밍 규격 MQA도 지원해 사용자들이 부담없이 고품질 음원을 즐기도록 했다.

음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오레오 업데이트로 스마트폰 시장 음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도 이러한 기능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향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갖춰져야 충분한 성능을 누릴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존 출시 제품의 음향 성능을 강화한 만큼 올해 출시되는 갤럭시S9 등에는 관련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멀티미디어 특화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음질에서 우위를 점해온 LG전자도 강력한 한 방을 위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가계·중소대출 더 어려워진다 은행들 1분기 심사 더 옥죄릴 듯

한은, 국내 은행 대출태도지수 -18 기록

올 1분기 가계와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여신심사 강화 정책으로 앞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태도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8을 기록했다. 전분기 -8 대비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대출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의 대출태도 서베이는 국내 199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신용 위험, 대출 수요 등을 보여준다. 대출태도지수가 양(+)이면 대출심사 완화를, 음(-)이면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 3에서 0으로 소폭 강화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3에서 -7로 대폭 강화됐다. 당국이 오는 3월 도입 의사를 밝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관리대상 업종 선정과 업종별 대출한도 설정,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시 이자상환비율(RTI)를 고려한 여신심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 역시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중부채상환비율(DTI)과 1분기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에 따라 전분기 -27에서 -30으로 푹 떨어졌다. 아울러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대출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이노비즈기업, 8년간 27만개 일자리 창출 성과

지난해만 3만5660개 만들어 2022년까지 100만개 목표

이노비즈기업들이 최근 8년간 27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들이 지난해 총 3만566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비즈 기업들은 2010년부터 8년 연속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기간 창출한 일자리 수만 총 26만6839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확인된 기업 중 5인 미만 등을 제외한 3만774개사(이노비즈기업 1만6436개, 예비 이노비즈기업 1만431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가장 많은 2만6783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특히 업력 10년 이상 기업이 2만6983개를, 50인 이상 고용규모를 갖춘 기업이 2만680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업력과 고용규모가 클수록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았다고 파악됐다.

이노비즈기업은 국제적 혁신기준(Oslo Manual)에 따라 중소기업기업에서 인증한 업력 3년 이상의 기

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제도 도입 초 기였던 2011년 당시 1000개에서 지금은 1만8000여 개로 크게 늘었다.

특히 협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기관에 걸맞게 지난해 '5개년 전략체계'를 수립,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2만2000여개까지 인증 기업 숫자를 늘리고, 이들 기업이 총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또 현재 각 사당 평균 8.7명, 인증 기업 전체적으로 약 15만4000명 가량의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을 2022년까지 20만명, 2027년까지 27만명까지 늘린다는 포부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지난

한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으로 분회 및 전국 9개 지회가 총 3600여 명의 청년일자리 창출했으며, 특히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분회 기준으로는 총 2219명의 청년층 채용 연계를 통해 전국 운영기관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과 지원 활동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1면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파리바게뜨...'서 계속

시민단체 "제빵사 고용 자회사, 협력사 빼야"

해피파트너즈 노조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 통한 고용에 반대하며 이번 사태는 민노총과 한노총의 의견 차에 이어 해피파트너즈 노조까지 3개 노조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시민사회단체가 제빵사를 고용할 자회사의 지분·인적 구성에서 협력업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참여연대 등을 구성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SPC그룹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피파트너스에서 협력업체 지분을 빼라고 요구했다.

해피파트너즈 이사로 등재됐거나 직원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사장과 관리자를 배제하고, 해피파트너스라는 상호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어 "본사 요구대로 자회사가 제빵사를 고용하더라도 실질사용자인 본사가 제빵기사 고용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인용 기자

하청업체, 대기업에 원가인상부담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5개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되는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

받기를 원하므로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 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해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